

‘원 구성 마무리’ 민주당 결단만 남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법사위 안줄거면 다 필요없다”
예결위장 선출 오늘 데드라인
민주, 단독 선출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이란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예결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예결위원장 등 나머지 12개는 공식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내세우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9일간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복귀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통합당 없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통합당 입장이 나온 만큼 이제 공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막판까지 진지하게 협상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절박성과 긴박성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 그는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 원구성 결단을 요구하는 김 원내대표의

요청에 ‘야당인 통합당을 입장을 들여보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까지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선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최소한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은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멈춰선 안 된다”며 “책임 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꺾수를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과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에 나설 경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일지도 관심사다.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 선출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 선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

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무관”

용역계약 종료 시점 기다려 일괄 전환...2017년 합의사항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취업준비생들의 지적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들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도’를 약속한 2017년 5월

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다. 황 수석은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에 정규직 전환 계획에 합의했는데도 이제야 그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두고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용역계약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인 통합당에 이어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정부의 무원칙과 공사의 졸속 처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광주시의회도 원 구성 지연

민주, 상임위장 배분 놓고 격론...경선 30일로 재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후보 의장 후보 선출과 원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려고 했지만, 상임위원장 단 자리를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경선을 연기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후보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30일로 연기했다. 애초 22일 경선을 하기로 했지만, 이날로 연기됐었다. 따라서 경선이 두 차례 연기된 셈이다.

의장 후보에는 김용집 의원(남구1)과 김익주 의원(광산구1) 2명이 출마했으며, 부의장 2석과 상임위원장 5석에도 일

부 의원들이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의장 후보인 김용집 의원을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견을 보이면서 경선이 파행을 빚었다.

참석 의원들은 결국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일색인 지방의회가 후보의 의장 선거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결국 자리다툼에 양금만 쌓이고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형제의난 ‘점입가경’

‘유산 다툼’ 김홍업 “홍걸, 유언장 조작” 반박 입장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25일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홍걸이 노벨평화상 상금 일부를 동교동 사저 상속세를 내는 데 썼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희호 여사 장례식 후에 김홍걸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몰래 이 돈을 인출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상금 10억원과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인권 상 상금 1억원을 합친 11억원 가운데 3억원을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 평화,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사업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

다”고 말했다.

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상금을 유언대로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몰래 은행에서 인출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비례대표 선정이 무산될까 우려해 권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비례대표 선정이유에는 “권 이사장이 정식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자신이 경고했다”는 내용의 허위 가처분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 여사의 유언장도 공개하며 “이 여사가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을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을 조작한 거짓말”이라며 “참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한국전 참전 유공자 지원법 발의

명예수당 인상·진료비 면제 연령 제한 폐지 등

여야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이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인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

록 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케 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월 32만원 수준에 불과한 참전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6·25전쟁 남북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6·25전쟁 남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대한항공 여수 노선 폐지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 노선 폐지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재 의원은 “먼저 국토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대한항공의 여수 노선 폐지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아직은 노선 폐지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향후 신청을 하더라도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폐지

인가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대한항공 임원진과 2시간 가까이 면담을 했다”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한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대한항공의 공공성 측면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선 폐지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24시간 상담가능

직통 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